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연구

2023. 5.

국 세 청
김 광 민

〈목 차〉

국외훈련 개요

I. 들어가며	1
1. 연구개요 및 목적	1
2.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및 대응현황	5
가. 미국	5
나. 일본	9
다. 중국	12
라. 프랑스	15
II.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요성	17
1. 혁신형 중소기업 개요	17
가.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념	17
나. 벤처기업	18
다. 이노비즈기업	19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형 중소기업	20
가.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요성	20
나. 4차 산업혁명시대 성공적인 혁신기업 사례	21
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27
라.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방향	29
III. 혁신형 중소기업 조세지원	30
1. 조세지원 정의	30
2. 조세지원의 종류	30
3. 조세지원의 효과와 예상가능한 문제점	32
4. 조세지원 개요 및 사례	37
가. R&D 세액공제	37
나. 특허 상자 제도	42

다. 가속 감가 상각	48
라. 벤처캐피탈 세액공제	52
5. 조세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55
6. 바람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방향	56
IV. 우리나라 조세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59
1. 조세지원 현황	59
가. 창업단계	59
나. 투자, 자금조달 단계	60
다. 사업진행 단계	61
라. 합병 등 구조조정 지원	64
2. 우리나라 세제지원 규모	64
3. 국세청의 세정지원	68
4. 우리나라 조세지원의 문제점	72
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72
나. 우리나라 연구개발 지원의 문제점	73
V.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75
1. 세제지원의 일관성 유지	75
2.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접근성 향상	77
3. 감면악용 및 남용가능성 차단	79
4. 철저한 조세감면 사후관리	81
5.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의 항구화	82
6. 연구개발 조세지원 공제율 확대	84
7. 신성장동력 분야 확대	85
8. 창업단계 지원 확대	87
9. 민간 및 학계와의 연계 강화	91
VI. 결론	95
<참고자료>	103

<국외훈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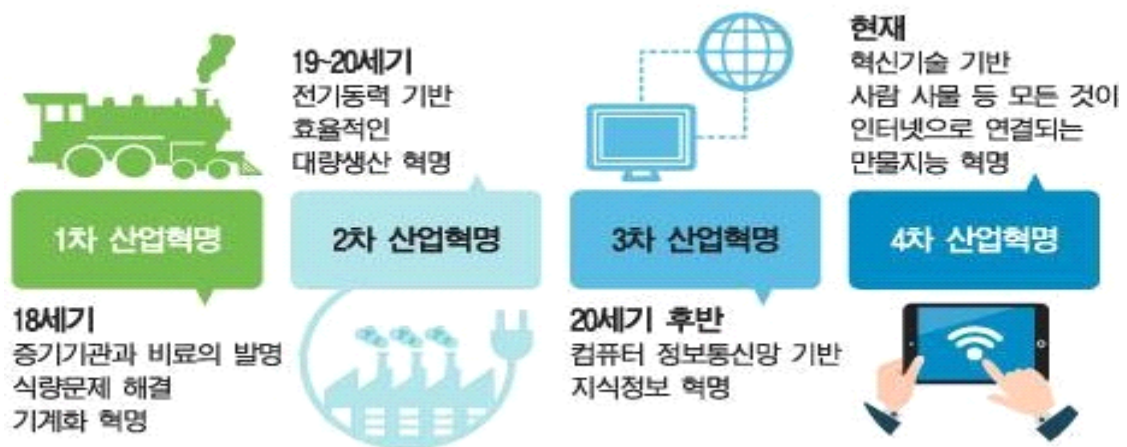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3. 훈련분야 : 회계와 조세
4. 훈련기간 : 2021. 8. 4. ~ 2023. 6. 3.

1. 들어가며

1. 연구개요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로봇공학, 나노기술, 3D 프린팅, 유전학, 생명공학기술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신기술들이 지능화 혁명을 통해 산업에서 뿐 만 아니라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¹⁾을 말한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화두가 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산업 뿐 만 아니라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은 새로운 산업의 지평을 열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림 1> 산업혁명의 진화



* 자료 : 내일신문 (16.10.20)

2016년 다보스포럼 이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39개 국가 중에서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평가²⁾하는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체코,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요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새로 발족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1) 舊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2018.6.14.(과학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용)

2) 4차 산업혁명 준비정도에 대한 스위스 연방은행(UBS) 평가 결과(16)

[표 1] 주요국 4차 산업혁명 대응정도 순위

	기술수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전체	25	5	12	13	28
노동시장	83	4	21	28	37
교육시스템 (교육수준)	23	6	21	17	68
법률시스템	62	23	18	19	64

* 자료 : UBS (2016)

** 전체 순위는 45개국 대상의 순위이며, 다른 항목은 139개국 대상의 순위

2017년 8월 16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익월 초대 위원장과 민간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이번 정부 들어 이 위원회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종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체하였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7년 6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추진상황 점검,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특징은 산업과 기술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는 것이다. 그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변경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큰 변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직업을 다수 창출하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생겨나는 대부분의 직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직업들이라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생소하지만 산업분야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AI엔지니어가 대표적이다. 가장 급격히 발전하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종전과 다른 사업특징 및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규모의 자본과 생산시설이 없더라도 아이디어와 특별한 기술만으로도 큰 성공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드론 전문가, 블로거, 유튜버, 무인운전 차량 엔지니어 등은 바로 최근 등장하여 종전의 직업을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전세계에서 기업가치가 10억불 이상으로 평가되는 10년 이내 설립된 비상장기업(유니콘 기업)은 총 260개로 이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121개가 미국에 위치해 있다. 특히 유니콘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에 각각 5개씩 소재하고 있다.

[표 2] 유니콘 기업 순위

(단위: 십만 달러)

순위	회 사	기업가치	국 가	산업군
1	Uber	\$68	US	On-Demand
2	Didi Chuxing	\$56	China	On-Demand
3	China Internet Plus Holding	\$30	China	eCommerce/Marketplace
4	Airbnb	\$29.30	US	eCommerce/Marketplace
5	SpaceX	\$21.50	US	Other Transportation
6	Toutiao (Bytedance)	\$20	China	Digital Media/ AI
7	Palantir Technologies	\$20	US	Big Data
8	WeWork	\$20	US	Facilities
9	Lu.com	\$18.50	China	Fintech
10	Bitmain Technologies	\$15	China	Blockchain

* 자료: CB insights research (2018. 09. 17.)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2019년 11개에서 22년 22개로 두 배 늘어났으나, 미국 2.9배(242개→704개), 인도 3.5배(24개→85개), 독일 3.0배(12개→36개) 등 주요 선진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대부분 3배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사실에서 국내의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형 스타트업 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추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느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에 하나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혁신 벤처기업들의 경쟁력과 기술이 다

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신생기업의 자금부족에 따른 이자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의 보증료율을 완화하여 창업 벤처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유니콘 회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산업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때 실패위험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높아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기업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의 유인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도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 우위에 있는 국내 대기업들도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끊임없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시장선점을 위한 신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역량은 가지고 있으나 시장규모나 외형이 작거나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무한경쟁의 혁신 시대에 자연스럽게 후발주자가 되거나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환경에서 혁

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의 시대에 핵심주체가 되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념과 사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 방안연구를 통해 조세지원 제도의 영향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조세지원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혁신형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및 현황

가. 미국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주요 기술변화를 의미한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앞서 인식하고 이 기술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계획(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이다. 2019년에 발표된 이 계획은 인공지능(AI)의 연구 개발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부문에서 이러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미국이 AI 혁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 부문 및 학

계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전략 계획은 구체적으로 AI와 관련하여 총 5가지의 영역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AI 이론, 알고리즘 등을 탐구하는 연구에 투자하여 AI 과학을 발전시키고,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AI 연구 및 개발 분야를 개척하고, 의료, 운송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고, K-12 학생부터 대학원생 및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개인에게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숙련된 AI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 AI 기술의 투명성, 책임 및 책임감 있는 사용을 촉진하여 AI의 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것들을 주요 영역으로 하고 있다.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계획 외에도 미국은 신기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는 첨단 제조 기술의 개발 및 채택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조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³⁾)를 출범했다. 이것은 첨단 제조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설립한 프로그램으로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관리하고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및 국립과학재단(NSF)을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NNMI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위치한 기관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각 기관은 특정 기술 영역 또는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둔다. 연구소는 제조 기술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및 정부를 연계한다. 각 연구소는 연방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고 민간 부문 투자와 일치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구성된다. 연구소는 업계, 학계 및 정부를 대표하는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며 CEO와 직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NNMI 프로그램은 첨단 소재, 로봇 공학 및 적층 제조(3D 인쇄)와 같은 새로운 제조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관련 업계에 최첨단 연구 개발 자원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3)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산업, 학계 및 정부 간의 협업 및 지식 공유 촉진 및 첨단 제조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숙련된 인력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한다. NNMI 프로그램은 2012년 출범 이후 미국 전역에 16개 기관을 설립했으며 첨단 소재, 포토닉스(광자학)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연구소는 고유한 연구 분야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협력과 혁신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발전시킨다는 공통 목표를 공유한다. NNMI 프로그램은 새로운 제조 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성공적으로 지원했으며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산학연계 및 정부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혁신 및 지식 공유문화 조성에도 기여했다.

미국은 향후 운송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자금제공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미국의 운송 산업을 혁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국 도로에서 이 기술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표준, 테스트 프로토콜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산업 이해관계자, 학술 연구원 및 기타 조직과 협력해 오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은 연구개발 자금, 시범사업, 민관협력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통부의 자동 운전 시스템(ADS) 프로그램은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이동성 및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둔 연구 개발 노력의 또 하나의 예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테스트 프로토콜 및 안전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스마트 도시 및 커뮤니

티에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 개발 노력에 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도로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에너지부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프로그램은 고급 센서, 기계 학습 알고리즘 및 배터리 시스템과 같은 자율 차량용 고급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 개발 노력에 자금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다. 예를 들어 DOT는 미시건 대학의 Mobility Transformation Center와 제휴하여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실제 테스트 환경을 개발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2020년 R&D에 1,50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자금은 건강, 에너지 및 국방과 같은 기초분야 연구에도 사용되었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R&D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mazon, Alphabet 및 Intel과 같은 회사는 매년 연구 개발 활동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 부문의 연구 개발(R&D) 활동은 산업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많은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기업 스스로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쟁업체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매년 R&D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매업체인 Amazon은 R&D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송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망 관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회사의 R&D 지출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에만 R&D에 약 453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2020년 359억 달러, 2019년 226억 달러의 R&D 지출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Google의 모회사인 Alphabet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2019년에 185억 달러, 2020년 214억 달러, 2021년에는 약 277억 달러를 R&D에 투자했다. Alphabet의

R&D 활동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터,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컴퓨터 프로세서 및 기타 컴퓨터 관련 선두 제조업체인 인텔도 R&D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R&D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2020년 인텔은 R&D에 약 136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R&D 활동에 대한 이들 회사의 막대한 투자는 여러 산업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Amazon의 R&D 노력은 배송 드론, AI 기반 가상 비서 Alexa와 같은 고급 배송 기술의 개발로 이어졌고, Alphabet의 R&D 활동은 Google 검색, Android 운영체제 및 Google Cloud의 개발로 그 결실을 맺었다. Intel의 R&D 투자는 최신 11세대 Intel Core 프로세서를 비롯한 혁신적인 컴퓨터 프로세서 개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회사는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쟁업체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매년 R&D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들의 R&D 노력은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져 미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의 경우에도 디지털, 물리, 생물학적 기술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 및 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일본이 추구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첨단 기술이 포괄적으로 활용되는 「Society 5.0」 사회구현이다. 「Society 5.0」의 목표는 첨단 기술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포괄적인 인간 중심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Society 5.0」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

책과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사물 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제조 공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더스트리 4.0의 개발을 촉진해 왔다. 이것은 제조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와 첨단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넥티드 산업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발에도 적극 투자해 왔다. 일본 정부는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 지능 기술 전략 사무소를 설립하고 AI 개발의 리더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일본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도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ccelerator Program)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도쿄의 신생 기업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도쿄의 산업국 및 노동국에서 관리하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전 가속 단계와 가속 단계의 두 단계가 존재한다. 사전 가속 단계에서는 스타트업이 멘토링과 자금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고 가속 단계 진입을 준비한다. 사전 가속 단계의 스타트업은 최대 200만 엔(약 \$18,000 USD)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속화 단계에서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지속되며 최대 1,000만 엔(약 \$90,000 USD)의 자금이 제공된다. 자금 지원 외에도 신생 기업은 경험 많은 기업가 및 업계 전문가로부터 멘토링 및 코칭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 멘토 및 잠재적 파트너 네트워크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 의료 및 환경 지속 가능성을 포함

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신생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스타트업은 먼저 도쿄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도쿄에 진출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제품 및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도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도쿄 신생 기업의 성장과 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평가된다. 2015년 출시 이후 이 프로그램은 총 5억 엔(약 \$450만 USD) 이상의 자금지원을 통해 7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웨어러블 장치를 개발하는 BionicM, 기업을 위한 채용 플랫폼인 Bizreach를 포함하여 여러 성공적인 스타트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념을 장려해 왔다. 기업, 대학 및 연구 기관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Japan Open Innovation Network(JOIN)와 같은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JOIN은 2015년 일본 정부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서 관리하고 경제산업성(METI)에서 지원하고 있다. JOIN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생 기업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JOIN 플랫폼, JOIN 액셀러레이터 및 JOIN 컨소시엄을 비롯한 여러 구성 요소가 있다.

JOIN 플랫폼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스타트업에게 자금 지원,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기

업과 신생기업이 서로를 협업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JOIN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이 기술 및 사업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지속되며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 및 업계 전문가의 자금 지원, 멘토링 및 코칭을 스타트업에게 제공한다. JOIN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은 또한 투자자, 멘토 및 잠재적 파트너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 JOIN 컨소시엄은 스타트업과의 혁신 및 협업 지원에 전념하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말한다. JOIN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JOIN 플랫폼에 참여하고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게 된다.

JOIN은 일본의 대기업과 신생 기업 간의 협력과 혁신을 성공적으로 촉진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제도 시행 이후 2,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3,000개 이상의 협업을 촉진했다. 자율 주행을 위한 인공 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Preferred Networks와 의료 영상 분석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Holoeyes를 포함하여 여러 성공적인 신생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개발에 있어 STEM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학교 및 프로그램 설립, STEM 졸업생 채용 촉진 등 STEM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일본은 첨단 기술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특허 기술로 얻은 소득에 대해 적용세율을 낮추고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허 상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 촉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중국

4)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중국은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혁신과 기술 개발 촉진,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 중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을 승인·발표하였다. 먼저, 연평균 6% 이상의 GDP 성장을 달성 목표를 위해 새로운 산업,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행정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개선하여 고품질 개발 촉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시장지향적 개혁 추진,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은 새롭고 진보된 기술의 개발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된 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인재 양성, 기업가 정신 촉진, 혁신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했다. 우선, 기술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연구 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공 지능(AI), 5G, 사물인터넷(IoT) 같은 신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3,69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신기술 분야의 숙련된 노동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천인 계획」은 2008년 중국정부가 전 세계의 최고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에게 높은 급여, 넉넉한 연구 자금, 최첨단 연구 시설 이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세금 감면, 연구 자금 지원, 기타 정부 자원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천인계획은 중국의 기술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최고의 인재를 중국으로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된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의 중국과 달리 과학, 공학 및 기술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이 리더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플러스」 계획은 인터넷을 전통 산업과 통합하여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신기술 및 첨단 기술 개발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연구 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허브와 과학 공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AI, 5G, Io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투자 및 개발의 핵심 영역으로 보고 「차세대 인공 지능 개발 계획」과 같은 AI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계획은 중국을 첨단 제조 허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로봇공학, 항공우주 및 신에너지 차량을 포함한 10가지 핵심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중국의 제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외국 기술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The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도로, 철도, 항만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과 다른 국가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70개 이상의 국가를 포함하며 무역과 경제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국은 5G 네트워크 및 AI 기반 운송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회사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 및 인구수를 감안할 때 중국의 회사는 대규모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나 신생회사는 다른 나라의 신생기업보다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신기술 개발과 이러한 기술과 전

통 산업 통합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기차고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로 이끌고자 한다. 다만, 중국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비효율과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호주의 정책과 외국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관련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정보 통제와 표현의 자유 제한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라. 프랑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프랑스의 접근 방식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 발전의 혁신, 연구 및 개발, 인적 자본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8년 프랑스는 혁신, 인적 자본,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술 배포, 국제 협력이라는 4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전략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이 전략은 프랑스가 경쟁력과 혁신을 유지하고 기술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는 4차 산업혁명에서 혁신과 경쟁력의 핵심 동인으로 연구개발(R&D)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부수준에서 이러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R&D에 대한 지출은 2019년 GDP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혁신 생태계는 학계, 정부 및 산업 간의 협업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에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국립 과학 연구 센터(CNRS) 및 프랑스 국립 컴퓨터 과학 및 응용 수학 연구소(Inria)와 같은 여러 세계적 수준의 연구 기관이 있다. 또한 프랑스는 강력한 스타트업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는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유럽의 주요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스타트업에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French Tech Initiative, 스타트업에 작업 공간과 지원을 제공하는 Station F 스타트업 캠퍼스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French Tech Initiative는 프랑스의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프랑스를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허브로 홍보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된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자금과 지원을 통해 프랑스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허브로 프랑스를 적극 홍보하여 외국인 투자와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가·투자자 및 정부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프랑스의 신생 기업을 위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기업가 및 투자자를 위해 비자 취득을 위한 빠른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최소 €50,000의 자금 조달, 사업 계획 및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생 기업의 설립자, 직원 및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파리, 리옹, 마르세유와 같은 13개의 주요 도시를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허브로 지정하여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및 공동 작업 공간을 포함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 기업가에게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45,000유로의 보조금, 사무실 공간,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 멘토링을 포함한 자금 및 지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이것은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외국 인재를 프랑스로 유치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보조금, 대출 및 세금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프랑스의 신생 기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 옵션도 제공한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French Tech Seed 펀드, 프랑스 스타트업과 실리콘 벨리의 투자자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French Tech Bridge 프로그램 등 초기 단계 자금조성에서 성장 및 확장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지원정책이 존재한다.

Station F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스타트업 캠퍼스로 2017년에 출범했으며, 34,000제곱미터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프랑스 및 국제 기업을 포함하여 1,000개 이상의 신생 기업이 본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신생 기업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혁신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캠퍼스는 스타트업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개인 사무실, 공유 사무실, 핫 데스크 등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작업 공간이 제공되고, 370석 규모의 강당, 옥상 테라스, 여러 회의실 등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 있어 네트워킹 이벤트, 컨퍼런스 및 제품 출시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제 스타트업을 위한 3개월 프로그램인 파운더스 프로그램(Founders Program), 추가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위한 6개월 프로그램인 The Fighters Program, 모금·마케팅 및 제품 개발과 같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워크숍 및 교육 세션 이벤트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법률 및 회계 서비스, 마케팅 및 브랜딩 서비스, 투자자 및 멘토 등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출범 이후 Station F는 프랑스와 그 외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캠퍼스는 프랑스가 국제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프랑스 스타트업이 세계에 자신의 사업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캠퍼스는 성 평등 증진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II.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요성

1. 혁신형 중소기업 개요

가.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념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는 앞선 다양한 연구들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innovating SMEs),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Technology-based

SMEs), ‘혁신형 중소기업’ (innovation type SMEs)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여 졌으며, 연구자들마다 그 정의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김영배, 2005). 그러나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징표 중 하나는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적인 징표를 추출하여 새로이 개념화해 보자면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기술혁신에 대한 결과와 성과가 뛰어난 기업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대체로 새로운 상품의 개발 성과, 특히, 기술혁신 건수 및 비율 등 다양한 사업의 성과가 일반 중소기업보다 우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Kim et al., 1993; Hicks and Heged, 2005). 우리나라는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들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으로 세분화하여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일반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으로 이루어진 투자가가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의 개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신생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병헌, 2007). 벤처기업의 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 등이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는 정부주도로 수행되어 왔으나, 2021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을 하고 2년 간의 유효기간이 인정되도록 개편되었다.

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⁵⁾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37,686개사의 벤처기업 의 총 종사자 수는 83만 4,627명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전년 대비 17,330명이 증가하여 2.1% 증가한 수치이다. 4대 그룹 전체 고용 인력 72만 명보다 약 11만여 명이 많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벤처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2021년말 기준 벤처기업 37,686개사(예비벤처, 휴폐업 등 633개사 제외)의 경영성과, 고용 및 연구개발 등을 분석

<그림 2> 벤처기업 확인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평가기관
유형1 벤처투자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인정대상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산정기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업종별 기준확인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형3 혁신성장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형4 예비벤처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기술보증기금

*** 자료 : 벤처기업협회**

다.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기업은 혁신을 의미하는 innovation와 기업을 뜻하는 Business를 합성하여 만든 신조어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경쟁기업에 비해 특별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OECD의 기술혁신성 평가매

뉴얼(Oslo manual)에 비추어 기술혁신 능력, 기술 사업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를 포함한 4가지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그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평가받아 기술의 경쟁력과 성장의 가능성을 공인받은 기업으로 정의된다(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업력이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은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과 평가지표에 대해 스스로 진단하여 체크한 후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노비즈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의 경우, 금융, 세제,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이노비즈기업의 경우 취득세 중과조치가 면제되며, 정기 세무조사는 최대 7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료의 10% 할인, 보증한도는 최대 30억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형 중소기업

가.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요성

국제중소기업협의회⁶⁾(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고용의 5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탄력성 있게 시장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의 주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이전의 산업혁명이 먼저 증기로 움직이는 산업혁명, 다음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산업혁명,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시스템의 통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성공적인 혁신 중소기업은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데

6) 1955년에 설립된 ICSB(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는 전 세계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회원 조직으로, 출판물, 프로그램, 워크샵, 교육 세션 및 인증을 통해 각자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공 지능, 로봇 공학, 사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이러한 기술에는 상당한 투자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자원이 한정된 중소기업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4차 산업 혁명이 제공하는 투자와 성공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재원의 부족,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제한된 접근, 복잡한 규제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의 양극화 문제이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겪어 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크게 변화되었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및 규모의 격차가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고착화 되는 경우 경제적 갈등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국가의 안정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또 다른 대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 4차 산업혁명시대 성공적인 혁신기업 사례

4차 산업 혁명은 기업경영 및 운영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큰 대기업에 비해 이러한 변화에 더욱 빠르고 탄력성 있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인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다국적 에어컨 제조업체인 Daikin Industries는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성공적으로 기업운영에 통합했다. Daikin의 공장에는 기계 성능에서부터 에너지의 사용까지 모든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와 IoT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장의 비효율성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 제조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관련원가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다.

Daikin Industries는 IoT 장치와 센서를 사용하여 제조 공정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공장의 기계 성능에서 에너지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갖추으로써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효율성과 개선 기회를 식별하였다. 예를 들어, 이 회사는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을 인식하고 제거하여 자재 흐름을 개선하고 폐기물까지 줄일 수도 있었다. 또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Daikin Industries의 또 다른 성공요인은 예측유지 관리를 사용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회사는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기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가 필요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 수리가 필요해지기 전에 보수함으로써 이 기업은 유지보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약하여 가동 중지 시간을 줄이고 운영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Daikin은 또한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는 센서가 장착되고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스마트 에어컨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고객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온도와 설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주었다. Daikin은 또한 고객에게 에어컨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객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반 가상 도우미도 개발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Daikin Industries의 성공사례는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의 힘을 보여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기술

을 수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Daikin은 회사운영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트니스 장비 및 미디어 회사인 Peloton도 데이터 및 연결의 힘을 활용하여 피트니스 산업을 혁신했다. Peloton의 운동용 자전거와 러닝머신에는 사용자의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피트니스 경험을 개인화하는 데 사용된다. Peloton은 또한 사용자에게 어느 장소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라이브 서비스와 구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eloton의 운동용 자전거와 운동기구에는 사용자의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와 IoT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이 데이터는 피트니스 경험을 개인화하는 데 사용되어 사용자에게 실시간 피드백 제공과 맞춤형 운동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그리고 Peloton의 구독 기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스트리밍할 수 있는 실시간 및 주문형 피트니스 수업에 대한 액세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와 연결의 힘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피트니스 수준과 선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Peloton은 초보자부터 피트니스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또한, Peloton의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탐색하고 적합한 클래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회사는 또한 사용자가 다른 회원과 연결하고, 그룹에 가입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SNS 기능도 개발했다.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공급망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여 제품이 적시에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되도록 운영 효율성도 개선했다. Peloton은 또한 고객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담당자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AI 기반 챗봇까지 개발했다.

영국의 접이식 자전거 제조업체인 Brompton Bicycle도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수용하여 생산 공정을 개선한 또다른 사례이다. Brompton의 공장에는 더 빠르고 정밀하게 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해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과 자동화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회사는 또한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스마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공급망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요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로봇 공학과 자동화를 사용하여 제조 공정을 간소화한 것이다. Brompton은 공장에 로봇 시스템을 구현하여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복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Brompton은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가와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제조 공정에서 디지털화를 채택했다. 이 회사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신제품을 디자인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신속하게 반복하고 테스트할 수 있었다. Brompton은 또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재고 수준을 최적화하여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올바른 부품과 구성 요소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 기업 역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Brompton은 고객이 회사와 더 쉽게 상호 작용하고 자전거를 맞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도구 및 서비스를 개발했다.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고객은 다양한 색상, 구성 요소 및 액세서리 중에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자전거를 구성하고 주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는 사용자에게 유지 관리 및 수리에 대한 개인화된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제공한다.

Brompton은 또한 순환 경제의 개념을 수용하여 자전거를 쉽게 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Brompton의 자전거는 교체 가능한 부품과 이것들을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접근 방식은 낭비를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리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치과병원 체인인 MyDentist는 기술을 사용하여 환자 경험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MyDentist의 클리닉에는 치과 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징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회사는 또한 예약 일정 및 환자 기록 관리와 같은 관리 작업을 간소화하는 클라우드 기반 관리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러한 디지털 치과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yDentist는 디지털 엑스레이, 구강 스캐너 시스템과 같은 기술에 투자하여 치과 의사가 치아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치과 의사는 크라운 및 브리지와 같은 보다 정확하고 맞춤형 치과 복원을 생성하여 환자 치아의 수명과 심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원격 치과를 수용했다. 이 회사는 환자가 화상 회의를 통해 치과 의사 및 전문의와 연결할 수 있는 원격 상담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MyDentist는 환자, 특히 외딴 지역이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MyDentist는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운영체제도 최적화하고 있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자 만족도를 모니터링 및 개선하고, 치료 결과를 추적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일정, 인력 배치 및 공급망 운영을 최적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전반적인 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MyDentist는 또한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 및 환자 참여 전략을 채택했다. 이 회사는 SNS, 이메일 및 기타 여러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여 환자와 소통하고 구강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과 환자 포털을 통해 환자가 쉽게 약속을 예약하고, 치료 기록을 보고, 치과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농업 기술 회사인 FarmLogs도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고객들이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센서, 드론, 위성 이미지를 포함한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농작물 수확량에서 날씨 패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생산성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먼저, 정밀 농업 기술을 사용하여 작물 관리를 최적화한다. 농부들이 센서, 드론 및 위성 이미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물 성장과 토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을 개발했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물, 비료 및 기타 입력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관리 계획을 만들어 작물 수확량을 개선하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고객들이 사업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공급망 관리 도구를 채택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농부들은 재고, 판매 및 비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수익을 개선할 수 있었다. FarmLogs는 고객들에게 위험을 관리하고 운영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 및 보험 상품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FarmLogs의 또 다른 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다. 회사의 정밀 농업 기술은 농부들이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생태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FarmLogs는 또한 보존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촉진하고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을 수용하여 농부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일기 예보, 토양 수분 센서 및 작물 수확량과 같은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농민에게 운영을 최적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과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공한 중소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혁신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기업은 운영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장점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대기업보다는 작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경영자의 새로운 도전정신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면 미래의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혁신형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달리 소액의 투자금액일 지라도 쉽게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한편, 실패와 재도전이 어렵지 않은 기업생태계 구축도 필요하다. 미국을 혁신 선도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벤처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실패가 경제생태계에서의 배제를 의미하게 된다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시험과 투자는 요원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도전적인 중소기업이 한 번의 실패에 낙오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치는 중소기업이 그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세금 인센티브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혁신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조치는 기업이 연구 개발(R&D) 및 기타 혁신 활동에 투자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금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이 혁신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극복하고 그들이 더 쉽게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재정적 장벽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지원 조치가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R&D) 투자 장려

중소기업은 종종 R&D에 투자할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투자의 제한은 중소기업이 혁신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R&D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의 R&D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경쟁력 강화

혁신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 세금지원 조치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장려와 적극적인 도전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졸업과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해 준다.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촉진

대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 개별기업이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작으나, 전체 중소기업이 노동시장에 작용하는 영향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며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혁신은 고용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조치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많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번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㉔ 삶의 질 향상

혁신은 건강, 안전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조치는 이러한 유형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라.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방향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선행연구(김재진, 2014)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의 입장에서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효과가 있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77.7%로, ‘효과가 없다’ (22.3%)라는 응답의 세배가 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효과성 여부를 떠나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나 운영자에게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이 인정되어 투자나 운영 인센티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4.4%)이 조세지원제도의 지원항목이 미흡하다고 대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이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조세지원 수준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혁신형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조세지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Ⅲ. 혁신형 중소기업 조세지원

1. 조세지원 정의

조세지원은 정부가 조세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정책도구들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R&D 투자 또는 기타 혁신 활동과 같은 특정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인센티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은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또는 혁신 촉진과 같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예를 들면, R&D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특정 산업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부문의 특정 행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

조세지원 조치는 정부가 더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활동에 기업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특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이 혁신에 투자하고 운영을 확장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장을 왜곡하거나 특정 회사에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조세지원의 종류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은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기타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조세지원 조치는 다음과 같다.

㉠ R&D 세금 공제

이것은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 R&D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R&D 세금 공제는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R&D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가속 감가상각

이 유형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은 일반적인 감가상각으로 가능한 것보다 더 빨리 자산비용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자산 감가상각을 가속화함으로써 기업은 세금부담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투자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투자 세금 공제

이 세금 공제는 기업이 새로운 장비, 건물 또는 기타 자산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투자 세액 공제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 쉽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많은 국가에서 신규 사업 시작과 관련된 법률 수수료, 회계 수수료 및 기타 비용과 같은 창업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줄이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혁신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 또는 저작권과 같은 혁신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 세금 면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세금에서 면제함으로써 정부는 기업이 혁신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㉔ 세금 공휴일(Tax Holiday)⁷⁾

세금 공휴일은 특정 활동이나 산업에 대한 일시적인 세금 면제이다. 세금 공휴일은 종종 기업이 신기술, 녹색 에너지 또는 기타 혁신 산업과 같은 특정 영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데 사용된다.

전반적으로 조세지원 조치는 국가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인센티브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특정 유형의 세금 지원 조치는 정부의 특정 목표와 대상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3. 조세지원의 효과와 예상가능한 문제점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 과연 조세지원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수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국가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주요 연구결과 가운데 손원익(2002)은 기업의 R&D 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조세지원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금액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원종학·김진수(2006)는 정부의 조세인센티브가 대기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며, 연구개발투자의 탄력도

7)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한시적 기간 또는 한시적 기간 동안 시행하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조치를 일컫는 말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 등이 공제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형태로 제공되고, 소비자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일시적으로 판매세를 면제받는 형태이다. 택스 홀리데이(tax holiday) 또는 택스 프리 데이(tax free day), 택스 프리 워크(tax free week) 등으로 불린다.

는 대기업 0.2~0.35, 중소기업 0.01~0.03로 나타났다. 손원익·김상현·김형준(2006)의 연구결과 역시 비슷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세지원이 1% 높아질 때 사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최대 0.363%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송종국(2007)의 연구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기업 비용이 1% 줄어들면 대기업의 R&D는 0.99%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증가폭(0.054%)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정규언·박재환·오광욱(2012)에 따르면 조세공제율이 감소된 시기에는 기업들이 설비투자 활동을 줄이고, 확대될 때에는 투자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조세지원 규모에 따라 투자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해외연구의 결과로는 Brown(1984), Berger (1993), Dominique and Potterie (1997),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12) 등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인센티브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00여개사의 중소기업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화조사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조세지원 및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이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될 사항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실제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3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0%,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1%를 보여주었다. 반면 ‘매우 도움이 안됨’은 1.6%에 불과하였고 ‘별 도움이 안됨’도 13.4%의 응답을 보임으로써 15.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선 벤처기업의 연구에서 보여준 결과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조세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는 먼저 ‘세금부담의 경감’을 가장 많이 응답(74.2%)하였고, 그 다음으로

으며, ‘시설연구개발 등 투자촉진 유인 효과’ (10.0%), ‘고용유지 인력채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 (7.9%)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 정부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구 분	사례수 (명)	도움			보통	도움 안됨			
		매우 도움	도움	도움 없		별 도움 안됨	매우 도움 안됨	도움 안됨	
전 체	(500)	7.0	31.0	38.0	47.0	13.4	1.6	15.0	
업종	제조업	(350)	5.7	28.6	34.3	50.0	13.4	2.3	15.7
	비제조업	(150)	10.0	36.7	46.7	40.0	13.3	-	13.3
소재지	수도권	(278)	6.1	29.9	36.0	45.0	17.3	1.8	19.1
	비수도권	(222)	8.1	32.4	40.5	49.5	8.6	1.4	9.9
21년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88)	6.8	21.6	28.4	42.0	25.0	4.5	29.5
	50명 미만	(249)	6.0	31.7	37.8	51.4	9.6	1.2	10.8
	100명 미만	(96)	8.3	31.3	39.6	45.8	13.5	1.0	14.6
	100명 이상	(67)	9.0	40.3	49.3	38.8	11.9	-	11.9
21년 매출액	100억원 미만	(193)	4.7	21.8	26.4	51.3	18.7	3.6	22.3
	200억원 미만	(118)	5.9	39.0	44.9	47.5	6.8	0.8	7.6
	200억원 이상	(189)	10.1	35.4	45.5	42.3	12.2	-	12.2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22)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외형(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세혜택이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먼저 ‘조세혜택 지원 규모가 적음’ 을 가장 많이 응답(42.7%)했으며, 다음으로 ‘지원혜택을 전혀 못받음’, ‘당초 납부할 세금이 적어 혜택 자체가 적다’ 는 순으로 설문에 응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41.7%가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조세지원 혜택을 전

혀 받지 못하였으며, 조세지원 제도자체를 알지 못해서 신청조차 못한 기업도 33.3%를 차지하였다. 또한 조세지원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제도 활용 자체를 포기한 응답자도 20.8%를 차지하였다.

[표 4] 제도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하여야 할 사항

(: %)

구분	사례수 (명)	지원 대상 확대	감면율 확대	홍보 교육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최저한 세율 인하	중복 적용 확대	제도의 지속성	근로자 요건 제외
전체	(500)	31.2	24.6	12.4	12.2	9.2	5.2	5.0	0.2
업종	제조업	(350)	30.3	26.0	11.4	10.3	9.7	6.0	0.3
	비제조업	(150)	33.3	21.3	14.7	16.7	8.0	3.3	-
소재지	수도권	(278)	27.7	25.5	13.3	13.7	10.1	4.0	-
	비수도권	(222)	35.6	23.4	11.3	10.4	8.1	6.8	0.5
21년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88)	35.2	17.0	17.0	9.1	10.2	2.3	-
	50명 미만	(249)	28.9	26.5	12.4	12.9	10.4	5.6	-
	100명 미만	(96)	34.4	24.0	11.5	12.5	4.2	7.3	-
	100명 이상	(67)	29.9	28.4	7.5	13.4	10.4	4.5	1.5
21년 매출액	100억원 미만	(193)	30.6	20.2	13.5	13.0	13.0	3.6	-
	200억원 미만	(118)	33.9	28.0	14.4	8.5	4.2	6.8	-
	200억원 이상	(189)	30.2	27.0	10.1	13.8	8.5	5.8	0.5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22)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지원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감면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감면율 확대(24.6%), 제도홍보 및 교육강화(12.4%) 순으로 응답하였다.

외형(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전체 응답 순위와 다르게 신청절차 간소화를 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세 번째(13.8%)로 꼽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중소기업이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확대되어야 할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지원 항목에 대한 응답율이 42.0%로 가장 높았으며, 투자촉진(22.2%), 상생협력(13.4%)

항목이 그 뒤를 따랐다.

대체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비즈니스 활동,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이 기업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종종 비효율적임을 시사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 경우 세금 인센티브가 비효율적인 주요 원인으로서는 복잡성과 제한된 범위를 지적하고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대체 정책이 중소기업의 육성 및 투자촉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조세지원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특정 유형의 세금 인센티브, 사업의 규모와 성격, 더 넓은 경제적 맥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조세지원 조치는 기업과 정부에 이점과 어려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세지원 조치는 기업이 R&D 또는 신기술과 같은 혁신에 투자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핵심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세금 지원 조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및 성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운영을 확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지원 조치는 혁신 투자의 재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공제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 및 프로세스에 투자하는 위험을 더 쉽게 감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정 활동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하기에 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금 지원 조치는 R&D 투자 부족 또는 신기술 개발과 같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적 인

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주요 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만, 조세인센티브가 특히 대규모로 제공되는 경우 이를 시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용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잠재적인 혜택과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금지원 조치는 제도 자체가 복잡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감면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한 재무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의 세금지원 조치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겨 인센티브가 의도하지 않은 기업에 편중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지원 조치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만 제공되는 경우 시장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고 특정 회사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세금 인센티브 비용이 혜택을 초과하여 경제 전체에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기 및 남용에 이용되는 것이다. 세금지원 조치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더욱 사기와 남용에 취약하게 된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이용하려 할 유인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세금지원 조치는 기업과 정부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신중하게 설계하고 구현되어야 한다. 세금지원 조치와 관련된 발생 가능한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조세지원 개요 및 사례

가. R&D 세액공제

(1) 개요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 지원 조치의 한 유형이다. R&D 세금 공제의 목표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고 개발하도록 장려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R&D 세액공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R&D 활동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작동한다. R&D 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먼저, 대부분의 R&D 세액공제 프로그램에는 어떤 활동이 연구 및 개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의에는 일반적으로 실험 개발, 응용 연구 및 기초 연구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제될 수 있는 적격 비용 요건이 존재한다. R&D 세액공제는 통상 적격 비용에만 적용되며 여기에는 R&D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금 및 기타 보상과 R&D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재료 및 장비 등이 포함된다. R&D 세액공제 금액 계산은 일반적으로 적격 비용의 백분율로 계산된다. 비율은 국가 및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격 비용의 10-20%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은 일반적으로 R&D 세액공제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된 세금이 환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기업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문서 및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장려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R&D 투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R&D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

래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의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하여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R&D 세금 공제를 사용하여 신기술에 투자하고 제품 및 사업을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Avakino이다. 세액 공제의 도움으로 Avakino는 R&D 예산을 늘리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새 직원을 고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계약을 확보하고 고객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2) R&D 세액공제 적용방식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세금 지원 조치이다. 이러한 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이 R&D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R&D 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요건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은 적격 R&D 비용의 일부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적격 비용에는 R&D 활동과 관련된 임금, 장비 및 계약 연구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적격 비용 및 R&D 활동의 정의는 국가 및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R&D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적격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세한 문서와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D 세액공제는 적격 R&D 비용의 백분율로 계산된다. 백분율은 국가 및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적격 비용의 10-20% 범위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출한 적격 R&D 비용이 \$100,000이고 R&D 세액공제가 15%인 국가에서 기업은 납부할 세액에 대해 \$15,0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R&D 세금 공제는 기업이 혁신 및 R&D 활동에 투자하는 데 상당한 재

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R&D의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핵심 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R&D 세액공제의 장단점

R&D 세액공제는 연구 및 개발 활동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먼저, R&D 세액공제는 연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R&D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상쇄함으로써 기업은 더 위험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더 기꺼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R&D 세액공제는 기업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현금의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사업에 더 많은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R&D 세액공제에는 몇 가지 잠재적인 단점도 있다. 무엇보다 R&D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기업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세한 증빙문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순응 역량이 제한된 소규모 중소기업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기업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세액공제를 남용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세액공제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남용과 사기를 적발하거나 단속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이 자격없이 세액공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R&D 세액공제는 이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R&D 세액공제는 연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기업과 경제 전체에 당초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4) 국가별 R&D 세액공제 제도

R&D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작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미국은 연방 R&D 세금 공제를 제공하여 기업을 위한 적격 연구 비용의 최대 20%를 공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주에서 자체 R&D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적격 연구 비용의 최대 15%까지 주정부 차원의 R&D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 영국

영국은 중소기업(SMEs)을 위한 R&D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격 R&D 비용의 최대 13%를 공제하고 있다. 대기업은 적격 비용의 최대 9.7%까지 R&D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R&D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적격 R&D 비용의 최대 35%를 공제한다. 대기업은 적격 비용의 최대 15%까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주에서 자체 R&D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 호주

호주 정부는 R&D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격 중소기업에 적격 R&D 비용의 최대 43.5%까지 환급이 가능한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은 적격 비용의 최대 38.5%까지 환급은 불가능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㉔ 프랑스

프랑스는 R&D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격 R&D 비용의 최대 30%까지 허용한다. 공제세액은 기본 수준 이상의 R&D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3년 동안 이월할 수 있다.

나. 특허 상자(Patent Box) 제도

(1) 제도 개요

Patent Box 제도는 Innovation Box 제도라고도 하며, 기업이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특허 또는 기타 적격 지적 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Patent Box 체제의 주요 목표는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이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및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지적 재산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세금 부채를 줄이고 절감액을 추가 R&D 활동에 재투자하도록 도울 수 있다.

Patent Box 제도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다. 각 국가의 프로그램에는 고유한 특정 규칙과 요구 사항이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Patent Box 제도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허, 저작권 및 상

표와 같은 적격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해당 재산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대부분 기업이 지적 재산과 관련된 R&D 활동이 제도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Patent Box 제도가 제공하는 세금 혜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적격 지적 재산에서 파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감면 세율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부분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Patent Box 제도는 기업이 특허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Patent Box 제도는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잠재적인 단점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Patent Box 제도가 국가 간 불공정한 세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이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금 계획 전략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Patent Box 제도가 대기업에만 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제약 회사인 GSK(GlaxoSmithKline)는 영국의 Patent Box 제도를 통해 세금을 크게 줄인 대표적인 기업이다. GSK의 혁신적인 R&D 활동으로 다수의 특허 의약품이 탄생했으며, 이 의약품은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회사는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환자와 산업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 Patent Box 제도의 작동 방식

Patent Box 제도는 기본적으로 적격한 지적 재산을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작동한다. 이러한 제도의 주요 목표는 기업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지적 재산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Patent Box 체제 하에서 기업은 적격 지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세금 혜택은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은 특허 또는 기타 적격 지적 재산에서 파생된 이익에 대해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Patent Box 제도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허, 저작권 및 상표와 같은 적격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해당 재산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은 지적 재산과 관련된 R&D 활동이 이 제도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기업이 Patent Box 제도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적격 지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고 해당 소득에 적용할 적절한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지적 재산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감면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Patent Box 제도와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 및 보고 의무 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은 위반에 따른 추징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적격 지적 재산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Patent Box 제도는 적격 사업체에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세금 계획(Tax Plan)을 목표로 하고 기업이 더 유리한 세금 제도가 있는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도록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Patent Box 제도가 주로 대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중소기업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의 생명공학 스타트업 GenSight은 세금부담을 줄이고 R&D에 재투자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GenSight는 희귀 안구 질환을 치료하기 위

한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고 회사의 특허 및 IP 자산을 통해 법인세율 감면 대상이 되었다. 이를 통해 회사는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희귀 안구 질환 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GenSight Biologics는 눈과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생명 공학 회사이다. 2019년 GenSight는 Leber 유전성 시신경병증(LHON)이라는 희귀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제인 LUMEVOQ에 대해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허 부여 후 GenSight는 프랑스에서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French Patent Box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Patent Box 제도는 회사가 LHON 유전자 치료법 특허를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의 감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현재 28%로 정해져 있는 프랑스의 표준 법인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GenSight는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추가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었다.

(3) Patent Box 제도의 장단점

Patent Box 제도의 주요 이점은 적격한 지적 재산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 감소된 세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감액을 추가 R&D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하고 지적 재산을 보호하도록 장려함으로써 Patent Box 제도는 혁신과 신제품, 프로세스 및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Patent Box 제도는 적격한 지적 재산을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Patent Box 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재적인 단점도 있다. 먼저, 특허 상자 체계는 요구 사항 및 보고 의무를 정확히 준수할

자원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데 복잡하고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특허 상자 제도가 국가 간의 불공정한 세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이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금 계획 전략에 참여함으로써 탈세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Patent Box 제도에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경쟁적인 환경이 아닌 소수의 대기업에 혁신과 경제 성장이 집중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실제로 R&D 활동에 투자하는 대신 더 유리한 조세 제도가 있는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도록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리고 일부 Patent Box 제도는 범위가 제한되어 특정 유형의 지적 재산에만 적용되므로 비즈니스의 잠재적 이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야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Patent Box 체제의 장단점은 특정 프로그램과 이에 참여하는 기업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Patent Box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잠재적인 이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다른 국가의 Patent Box 제도

많은 국가에서 혁신을 장려하고 적격 지적 재산을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Patent Box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Patent Box 제도는 특허 발명 또는 기타 적격 지적 재산에서 파생된 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제공한다. 감면된 세율은 현재 적격 이익에 대해 10%를 적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 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를 받은 혁신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했다. 기업은 적격 특허로 인한 전 세계 이익에 대해서도 10%의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Patent Box 제도는 특정 품목 및 데이터 독점권을 포함하여 여러 다른 유형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확장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7년부터 Innovation Box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적격 IP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법인세율인 25%가 아닌 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 제도는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 또는 특정 유형의 디자인권을 획득한 회사에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자격을 갖추려면 기업은 적격 지적 재산과 관련된 R&D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프랑스는 적격 IP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해 2019년 Innovation Box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하에서 기업은 적격 IP 자산의 순이익에 대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특정 유형의 권리에 적용되고, 자격을 갖추려면 기업이 적격 특허를 보유하고 해당 특허로부터 수익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벨기에는 2017년에 혁신 소득 공제(IIID)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은 적격 IP 자산에서 순이익의 85%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유효세율이 .1%까지 떨어지게 된다. IID 제도는 특허, 추가 보호 인증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특정 유형 권리에 적용된다. 역시 공제 자격을 갖추려면 기업은 지적 재산과 관련된 R&D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스페인인 2018년 적격 IP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제공하기 위해 Innovation Box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법인세율 25%에 비해 인하된 세율은 10%로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허, 실용신안권 및 특정 유형의 소프트웨어에 적용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Patent Box 제도는 적격한 지적 재산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 부분 면제를 제공하여 세율을 낮추고 있다. 정확한 세율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탈리아의 Patent Box 제도는 적격 지적 재산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 10%의 감면 세율을 제공한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R&D 비용을 발생시켜야 한다.

다. 가속 감가상각

(1) 가속상각 개요

가속 감가상각은 기업이 자산 내용연수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 공제를 받아 특정 자산의 비용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말한다. 정상적인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기업이 자산을 내용연수에 걸쳐 분산하는 경우 가속 감가상각보다 매년 더 적은 비용공제를 받게 된다. 가속 감가상각은 미국의 보너스 감가상각 및 섹션 179 감가상각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해에 적격 자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즉시 공제할 수 있다. 섹션 179 감가상각을 통해서는 영업을 시작한 사업연도 첫 해에 적격 자산의 전체 비용을 특정 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다.

가속 감가상각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등 사업에 있어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이 자산의 내용연수 즉 존속기한 초기에 더 큰 감가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속 감가상각은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새로운 장비 및 기타 자산에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속 감가상각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세금 전략을 간소화하게 하고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속 감가상각에는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한다. 먼저 가속 감가상각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보다 즉각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단기 이익에 집중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각 나라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적격 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산업 또는 혁신에 대한 투자유인으로서 적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가속화

된 감가상각은 세입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조세정책 입안단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속 감가상각의 장점과 단점은 해당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과 대상이 되는 기업의 구체적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가속 감가상각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기업은 잠재적인 이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가속 감가상각을 사용하여 신기술에 투자하고 세금을 절감한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호주 엔지니어링 회사인 WorleyParsons이다. 이 회사는 R&D 활동에 사용된 자산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가속 감가상각 규칙을 사용하여 연구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WorleyParsons는 에너지, 화학 및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이다. WorleyParsons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가속화된 감가상각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었다. 기업이 내용연수 초기에 자본 자산에 대해 더 큰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가속 감가상각 인센티브는 상당한 현금 흐름 이점을 제공했다. 호주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자산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WorleyParsons는 가속 감가상각을 사용하여 풍력 발전소와 태양 광발전 시설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WorleyParsons는 이러한 자산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을 청구함으로써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었고 따라서 지불해야 하는 세금도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선행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보다 실용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가속 감가상각은 WorleyParsons가 호주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데 중요한 도구였으며, 이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함으로써 WorleyParsons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며 호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수 있었다.

가속 감가상각 외에도 WorleyParsons는 호주 재생 에너지청(ARENA)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호주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었다. ARENA는 호주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여 이러한 프로젝트의 초기 비용을 상쇄하고 재정적으

로 더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WorleyParsons의 투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함으로써 WorleyParsons는 자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호주의 청정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수 있었다.

(2) 가속 감가상각 작동 방식

가속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자산 존속기간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 공제를 받아 자산 비용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정액법 등 특정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 연수 동안 자산을 비용화하는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즉 기업은 자산 비용을 내용연수 기간 동안 분배하고 매년 감가상각 공제를 받는다. 이때 가속 감가상각은 기업이 자산 수명 초기에 더 큰 감가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의 과세 소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속 감가상각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미국과 같이 보너스 감가상각 방식과 섹션 179 감가상각 방식이 있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해에 적격 자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즉시 공제할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0,000에 새 장비를 구입하고 보너스 감가상각률이 50%인 경우 기업은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에서 \$50,000을 즉시 공제할 수 있다. 반면에 섹션 179 감가상각은 기업이 적격 자산의 전체 비용을 사업을 시작한 해에 특정 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0,000에 새 장비를 구입하고 섹션 179 한도가 \$500,000인 경우 기업은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에서 \$100,000 전액을 즉시 공제할 수 있다.

보너스 감가상각과 섹션 179 감가상각 방식에는 이러한 세금 인센티브를 이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제한이 있다. 기업은 이러한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가속상각의 장단점

가속 감가상각은 과세 소득을 줄여 단기적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새로운 자산과 장비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세금 인센티브보다 감가상각 방식이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울 수 있으므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가속 감가상각은 기업이 즉각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장기 투자보다 단기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세입 측면에서 정부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속 감가상각은 산업 또는 혁신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관계없이 적격 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다. 기업입장에서 가속 감가상각은 다른 세금 인센티브보다 적용하기 쉬운 제도이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기업과 과세당국의 잦은 마찰을 초래하기도 한다.

(4) 국가별 가속 감가상각 사례

가속 감가상각은 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금 인센티브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보너스 감가상각 및 섹션 179 감가상각을 이용할 수 있다.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적격 자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섹션 179 감가상각은 기업이 특정 한도까지 적격 자산의 전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세금 인센티브는 기업이 새로운 장비 및 기타 자본 자산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캐나다는 가속 투자 인센티브(Accelerated Investment Incentive)라는 세

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산을 사용하는 해에 적격 자산 비용의 더 많은 비율을 즉시 공제할 수 있고, 공제 비율은 자산의 유형과 사용 연도에 따라 다르다. 영국에서는 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격 자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는 자본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공제 비율은 자산 유형과 사업이 운영되는 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호주는 소기업이 적격 자산의 전체 비용을 특정 한도까지 즉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Instant Asset Write-Off 라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세금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장비 및 기타 자본 자산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의 경우 특별 감가상각 수당이라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산을 사용하는 해에 적격 자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제 비율은 자산의 유형과 사용 연도에 따라 다르다.

라.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

(1)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의 개요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는 신생 기업 및 초기 단계의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인센티브로, 적격 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벤처 캐피탈 세금 공제의 목표는 투자자가 신생 기업 및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초기 단계 기업이 많이 직면하게 되는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세금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는 초기 단계 기업 및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일부 위험을 상쇄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투자 자본을 유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벤처 캐피탈 세금 공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산업 또는 사업 유형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에 종사하거나 특정 신기술에 중점을 둔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제공할 수 있다. 벤처 캐피탈 세금 공제는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설계하거나 시행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기업은 캐나다 기술 스타트업 Hootsuite이다. 캐나다의 세액 공제는 적격 중소기업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30%의 환급 가능한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Hootsuite는 이 세액 공제에 이끌린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회사는 성장·발전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2) 벤처 캐피탈 세액 공제 작동 방식

벤처 캐피탈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에 직접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러한 세액 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초기 단계 회사 또는 일정 금액의 수익, 자금 조달 또는 특정 산업, 부문에 속하는 것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 등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는 거주자와 같은 특정 요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투자자는 적격 회사에 직접 또는 벤처 캐피탈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된다. 투자 금액과 투자 조건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회사 간에 협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자는 투자 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특정 한도 내에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공제된다. 어떤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여러 해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는 세액공제 자격을 얻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투자를 보유하거나 유지해야 할 수도 있고, 세액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특정 정보나 증빙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3) 벤처캐피탈 세액공제의 장단점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먼저,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는 투자자가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초기 단계 기업 및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는 특히 전통적인 자본 출처가 부족한 지역에서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는 초기 단계 기업 및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일부 위험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투자를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는 신흥 기술이나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둔 산업이나 부문과 같은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는 세입의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또한,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는 특정 회사나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거나 소수의 회사 또는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전반적인 투자 수준이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의 관리는 복잡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자원이 소요될 수 있다.

(4) 국가별 벤처캐피탈 세액공제

미국에는 주 및 연방 수준의 여러 벤처 캐피탈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투자 회사(SBIC)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 회사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국은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및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를 포함하여 벤처 캐피탈 투자에 대한 몇 가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자격을 갖춘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캐나다에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CSBFP(Canadian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이라는 벤처 캐피탈 세금 공제 제도가 있고, 프랑스는 JEI(Jeune Entreprise Innovante) 프로그램이라는 벤처 캐피탈 세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혁신적인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ESVCLP(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기 단계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5. 조세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 발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입안자, 경제학자 및 기업가 모두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다. 세금지원 조치가 중소기업에 절실히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혁신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세금 지원 조치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연구 개발, 새 장비 구입 또는 직원 고용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재정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연구에 따르면 R&D 세금 공제 및 기타 유사한 조치가 혁신 성과와 재무 성과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R&D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투자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금 지원 조치에는 잠재적인 단점도 있다. 주요 과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지원이 없었더라도 회사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을 투자를 구축하지 않고, 기술과 특허 등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성이 높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 지원 조치가 불공평하다고 인식되거나 경쟁을 왜곡하거나 조세 회피로 이어지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세금 지원 조치가 중소기업이 접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세금지원 조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세금 지원 조치가 혁신, 생산성 및 성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효과는 극대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6. 바람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방향

세금 지원 조치는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적합하게 구현하는 것은 정부와 정책 입안자에게 어려운 일이다. 세금 지원 조치는 중소기업 특히 전담 세금 팀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금감면 청구 시 혼란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세금 지원 조치

를 제공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및 세수를 감안할 때 지원의 가용성과 효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유형의 연구 또는 개발 활동으로만 제한되는 세금지원 조치는 다른 분야의 더 혁신적인 중소기업에게는 그 혜택이 배제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최적의 세금 지원 조치를 설계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일 수 있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가. 명확한 목표 설정

세금 지원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혁신 장려, 일자리 창출 촉진 또는 경제 성장 촉진이 포함될 수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을 통한 선순환 성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금 지원 조치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업가를 위한 적합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며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와 같이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 정확한 지원대상 지정

세금 지원 조치가 효과적이라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례연구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올바른 지원 기준을 설정하거나 기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가장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다. 적절한 수준의 지원 제공

세금 지원 조치는 적절한 수준의 감면이 제공되는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로 확인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 신청 절차 간소화

조세관련 전문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을 위해 복잡한 규정 파악과 서류 작업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 등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신생기업이나 소규모의 기업들은 종종 복잡한 규정 및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조세지원 신청을 주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원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자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이해하고 탐색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세금감면 절차 마련, 온라인 리소스 및 도구의 제공, 비즈니스 교육 및 구체적인 지원관련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마. 기타

조세지원 외에도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 및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와 같은 다른 형태의 지원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이 세제 지원 조치와 병행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시너지를 발휘하여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의 투자 및 발전은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타의 지원은 조세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 모니터링 및 평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 지원 조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조세지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간 부문, 학계 및 정부 간의 협업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지식과 전문성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V. 우리나라 조세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1. 조세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세부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기업의 사업개시와 성장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창업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일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일정한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법령에 따른 일정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최초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기간 중에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동시에 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증가할 때에는 25~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합병이나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

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이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되어 있다.

취득세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해당사업을 위해 직접사용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3년간 면제받고, 그 이후 2년간은 50%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도 존재한다.

나. 투자, 자금조달 단계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서는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투자한 금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였다. 이때, 공제대상 자산은 미래형 자동차(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등), 지능정보(인공지능,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방송통신, 신재생에너지, 고기능섬유,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등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이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중견기업은 1%(수도권 밖에 투자하는 경우 2%)를 공제하였다.

[표 5]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요건

(중소기업)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규모기준)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기준 이내일 것
㉢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졸업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일 것
(중견기업)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상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규모기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㉔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㉕ (유형기준) 중소기업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였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요건은 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서는 생산성향상시설을 위해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였다.

그 밖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舊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3조),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다. 사업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비용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률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란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관련 비용 등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대상기술(13개 분야, 272개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을 뜻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림 3>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제외된 후 1~3년	제외된 후 4~5년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용	당해연도 투자금액	25%	15%	10%	8%	2%를 한도로 함**
	초과금액	50%	40%	40%	40%	25%
신성장연구· 인력개발비	가 항목	30%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나 항목	$\frac{\text{당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배$, 한도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가 항목	40%	30%			
	나 항목	$\frac{\text{당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수입금액}} \times 3배$, 한도 10%				

[표 6]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구 분	분 야
1.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2. 지능정보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스마트기기, IT융합,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스마트물류
3. 차세대SW 및 보안	기반 SW(소프트웨어), 융합보안
4.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5.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발광 다이오드), 3D프린팅, AR디바이스
6. 차세대방송통신	5G(5generation, 5세대)이동통신, UHD(Ultra-High Definition)

7.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학
8. 에너지·환경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발전시스템, 원자력, 오염방지, 자원순환
9.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 금속, 하이퍼 플라스틱, 구리합금, 특수강,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희소금속·소재
10.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 로봇, 로봇공통
11.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12. 첨단소재·부품·장비	첨단소재, 첨단부품, 첨단장비
13.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5%에서 30%까지 감면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자동차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자동차 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3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또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등 특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0% 추가 감면을 적용한다. 이때 감면세액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당 오백만원씩 그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하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를 감면하고 있고, 이러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5%를 감면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가업 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라. 합병 등 구조조정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중소기업 간에 통합을 유도하고 법인전환에 대한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이월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완화시킨다. 또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2. 우리나라 세제지원 규모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총 380,277개 법인이 약 10조원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신고하였다. 신고법인 중 중소기업이 9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신고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에 불과하다. 2021년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수입금액 규모별 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7]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수입금액 규모별	367,046	4,433,502	13,231	5,505,839
10억 이하	126,087	191,336	2,102	15,194
20억 이하	71,386	277,548	394	1,640

50억 이하	91,260	756,800	1,012	3,360
100억 이하	41,168	796,905	869	6,415
200억 이하	20,069	732,040	841	35,597
300억 이하	7,081	400,829	576	23,204
500억 이하	5,406	457,545	783	42,835
1000억 이하	3,706	481,829	1,205	108,724
5000억 이하	866	230,807	3,566	739,076
5000억 초과	17	107,863	1,883	4,529,793

* 자료: 국세통계연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 당 약 12백만 원의 공제감면을 신고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일반 기업은 약 42백만 원의 공제감면을 신고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의 수입규모 및 투자금액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한 비교는 힘들지만 일반기업이 약 3배 이상의 공제감면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법인 중에서도 수입금액 5,000억 초과 1,883개 법인이 일반법인의 공제감면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공제감면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000억 초과 일반법인은 법인 당 약 24억의 공제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표 8] 업종별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업종별	367,046	4,433,502	13,231	5,505,839
농·임·어업	4,474	31,543	117	2,543
광업	289	5,092	5	132

제조업	122,846	2,439,810	4,656	3,746,393
전기·가스·수도업	2,376	8,902	156	131,913
건설업	69,895	479,019	346	215,894
도매업	74,662	405,166	985	273,173
소매업	14,465	102,975	711	15,198
음식·숙박업	1,272	8,551	54	5,927
운수·창고·통신업	11,439	82,997	263	183,920
금융·보험업	868	18,489	2,729	180,761
부동산업	7,206	21,857	1,816	14,992
서비스업	56,623	813,777	1,336	724,024
보건업	465	14,411	53	10,720
기타 업종	166	915	4	248

*** 자료: 국세통계연보**

업종별로 공제감면 상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공제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그 금액도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편이다. 감면금액의 규모를 볼 때 제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나,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수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좀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이 대체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별 조세감면 실적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R&D 세제지원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제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OECD가 각국의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비교한 GDP 대비 R&D 세제지원 규모(18년 기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6위(0.1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R&D 관련 세제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GDP 대비 R&D 세제지원

(단위 : %)

1	2	3	4	5	6	10	-	-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한국	일본	OECD 평균	프랑스 (‘17년)	미국 (‘16년)
0.250	0.185	0.185	0.167	0.138	0.132	0.114	0.101	0.286	0.08

* 자료: OECD stats, Indirect government support through R&D tax incentives

또한, OECD는 각국 설문을 통해 R&D 세제 인센티브 크기를 추정하는 「Implied 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20년 기준으로 36개의 OECD국가와 11개의 비OECD국가를 대상으로 대기업(Large firm)과 중소기업(SME)을 구분하여 R&D 지출시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추정 지수를 제공한다.

[표 10] 우리나라 B-index 추이

	‘05	‘08	‘10	‘12	‘13	‘14	‘15	‘17	‘18	‘20
중소기업	0.16	0.17	0.26	0.26	0.26	0.26	0.26	0.26	0.26	0.26
대기업	0.11	0.11	0.11	0.11	0.08	0.06	0.04	0.03	0.02	0.02

B-index란, 화폐단위를 달러로 통일시키기 위해 가공한 지수로, 기업이 1달러를 R&D로 지출하는 데 손해 보지 않는 세전소득을 의미한다. 2020년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B-index가 0.02라는 의미는 0.98달러의 세전소득이 있으면 1달러를 R&D에 지출하여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0.02달러를 조세 인센티브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나, 각국의 R&D 세제지원의 모든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당기분과 증가분,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 구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중점 R&D 지원분야인 신성장·원천기술 R&D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수치를 통해서 조세 인센티브 목표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은 인지할 수 있다.

3. 국세청의 세정지원

국세청에서는 1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정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등 여러 가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표 11]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기업

구분	정의	인증기관
스타트업 중소기업	기술성·성장성이 높아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으로 설립 후 5년 미만인 중소기업	중기부
혁신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	중기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급여,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이 우수하여 청년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	고용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대비 2% 또는 4%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 2%, 3백억원 이상 : 4%	국세청에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4차 산업 관련기업	AI, 에너지신산업, 드론,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대상기업에 대한 인증기관이 없어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교육 등의 방법으로 지원	-

세정지원 대상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전환점마다 기업이 챙겨야 할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조력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원하는 세정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선정 제외 및 유예

국세청에서는 법인 및 개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혁신중소기업의 경우 정해진 성실요건·수입금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혁신성장 지원대상은 2년(지방은 3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 받게 된다. 스타트업과 혁신중소기업은 사업기간 또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자리창출 및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현재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나, 사전 통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국세청에서 세원관리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산세 기획점검, 간편 장부 점검, 지방청 자체 기획점검, 공제감면 개별사후관리 및 전산사후관리, 본·지방청 기획 분석, 자체 신고내용 확인 등 신고내용 확인, 기획점검 및 기획 분석 등의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할 때에도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고 접촉하는 현장 확인이 아닌, 서면검토를 통한 간접 확인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 확인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하고 있고(간접 확인 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현장 확인을 실시), 이외에도 수정·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등을 처리할 때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간섭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서면검토를 통해 현장 확인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 현장 확인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나. 체납처분 유예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체납처분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인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 원칙이지만,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 성실납세자 인정 기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자

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창업·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해 주고 있다.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받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스타트업 및 혁신중소기업의 경우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요건도 신설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창업 및 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국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가 유예된다. 납부기한 연장과 마찬가지로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이 지원되고, 스타트업 및 혁신중소기업의 경우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요건도 신

설되었다.

한편, 지원대상자가 국세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서가 접수되는 즉시 납세자의 청구세액 환급 적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그 청구가 적정한 경우 지체 없이 환급을 경정하여 납세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

라. 혁신성장 전담창구 운영 등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세제·세정상 지원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들이 세제·세정상 지원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지원 대상자인 경우 안내리플릿을 제공하고,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세목 과로 안내한다. 지원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등 민원업무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세적담당자가 직접 세정지원 사항 등을 안내해 주고 있다.

또한, 혁신성장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원활하게 수집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안심교실, 직능단체간담회 등 세무지원 소통주관을 활용하여 일선 세무서 현장을 중심으로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 혁신성장 거점세무서 운영

국세청에서는 IT·벤처 등 4차 산업 관련 혁신성장 기업이 집중된 지역의 세무서를 거점세무서로 지정하여 지정된 대상자(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등) 또는 4차 산업 유형 위주로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를 통해 납세자 의견을 수집하는 등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거점세무서에서 수집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본청에 건의하고 본청(각 국실)은

지방청에서 제출한 지원방안의 시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후 그 내용을 각 지방청에 전파하고 있으며, 세무서(거점세무서 포함)는 관할서의 세정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납세과 주관으로 과별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표 12]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현황

특화분야	세무서	주무부서	18년 기준 지원대상자 수 (특화분야 사업자 수)		특화분야 관련단체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금 천	중 기 부	1,745	(1,370)	벤처기업협회
	화 성		1,914	(1,562)	
	북부산		1,383	(1,135)	
	북대전		1,265	(1,034)	
	구 미		1,000	(773)	
	서광주		872	(627)	
스마트공장	안 산	중 기 부	1,488	(204)	
미래자동차	반 포	국 교 부	406	(회원사 45)	(사)한국전기차협회
드 론	서 초	국 산 교 업 부 부	975	(회원사 46)	한국드론산업 진흥 협 회
핀 테 크	분 당	금 용 위	1,039	(23)	(사)한국핀테크 산 업 협 회

4. 우리나라 조세지원의 문제점

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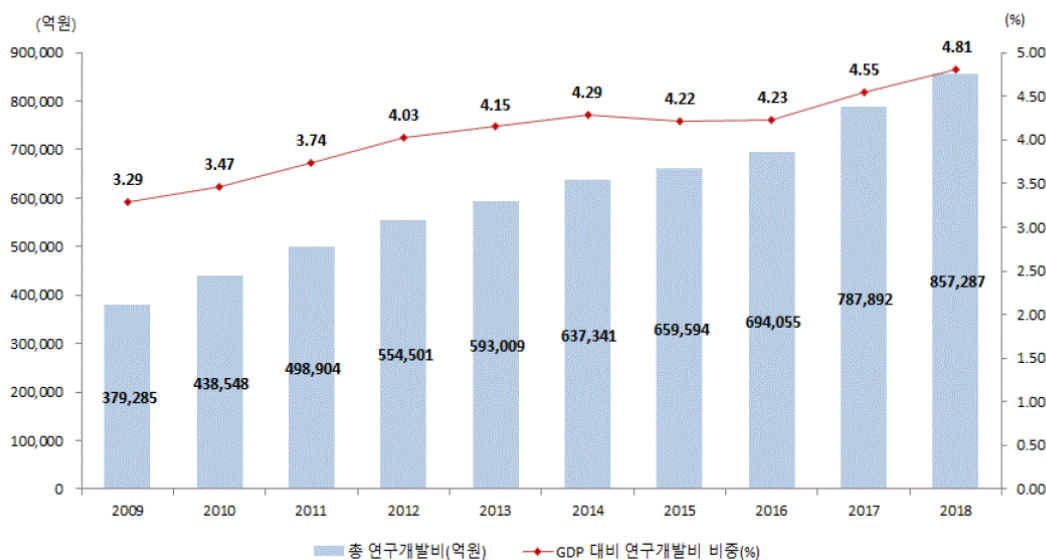
먼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성장시키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은 인지된 위험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성장 잠재력이 제한되기 마련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환경 보호 및 지적 재산과 관련된 규제는 중소기업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혁신은 중소기업 성장과 경쟁력의 중요한 동인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성장과 혁신에 대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이나 세금 인센티브가 존재하나, 조세특례 제도 및 특정 목적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자체도 여러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조세감면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일반 사업자보다 대기업과 부유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 간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고, 산업 전반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력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연구개발 지원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6조 9,395억 원이 증가한 85조 7,28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연구개발비 추이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활동조사), 한국은행

또한, 연구개발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1%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세계 1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과 R&D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연구개발비 (억달러)	779.0	5,432.5	1,561.3	1,121.9	565.2	438.9	2,604.9
비율	1.00	6.97	2.00	1.44	0.73	0.56	3.34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4.81	2.79	3.21	3.04	2.19	1.66	2.15

* 자료: OEC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2019.12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으로, 민간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주로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 주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생태계 조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성공하거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효과가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성공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나 감면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하고 있으며,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조세감면이 중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V.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1. 세제의 일관성 유지

세금 정책의 일관성은 기업가 및 투자자의 사업 계획 및 의사 결정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조세 정책이 자주 변경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없게 바뀌게 된다면 기업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은 사업의 불확실성, 비용 증가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2017년 세금 감면 및 고용법(TCJA)은 세금 정책의 변화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TCJA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낮은 세율, 더 높은 표준 공제액, 주

및 지방세 공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미국 세법에 상당한 변경을 야기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규모의 기업, 특히 해외 수익 송환 및 글로벌 무형 저과세 소득(GILTI) 계산과 관련된 새로운 세법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 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TCJA는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신 개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소유주에게 이익을 전달하는 사업체인 도관 사업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공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제 청구 기준이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어 사업주들 사이에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유럽 연합(EU)의 부가가치세(VAT) 시스템 사례를 살펴보다도 세금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EU는 회원국이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VAT를 부과하도록 요구하지만 각 국가마다 고유한 규칙과 세율이 있다. 이것은 복잡한 VAT 규정 및 세율 시스템을 각각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경을 넘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EU는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기업이 국경을 넘어 운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 회원국 전체에서 VAT 규정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많은 연구에서도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사업 계획 및 의사 결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World Bank의 연구에 따르면 조세 정책의 안정성은 유리한 사업 및 경영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세금 정책을 가진 국가의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세금 정책을 가진 국가의 기업보다 새로운 장비와 기술에 투자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조세정책의 일관성은 사업계획과 의사결정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금 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 뿐 만 아니라 모든 규모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 소유주에게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조세부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더 큰 불확

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세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은 기업의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안정적인 조세 정책을 가진 국가의 기업은 새로운 장비 및 기술에 투자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며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현재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납세자의 공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세순응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특히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 뿐 만 아니라 지출예정인 금액까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 개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에 앞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이 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미리 국세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심사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과 지출 예정인 비용(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 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기업의 R&D 활동 및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 심사효력: 심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세청이 심사결과와 달리 처분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배제
- * 다만,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탈루형의 있는 경우 제외

2.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접근성 향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연구(2014)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조세지원을 산업육성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대부분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도나 절차가 복잡해서 잘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활용 시에도 지원금액·항

목 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정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만들거나, 감면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세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표 14] 벤처기업 등 설문조사 결과

(항목1) 조세지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항목2)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항목3) 조세지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답변	비중	답변	비중	답변	비중
매우 그렇다	5.8	제도를 모름	45.2	지원항목 미흡	54.4
그런 편이다	72.0	지원대상 아님	31.1	지원금액 미흡	27.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8	제도나 신청이 복잡	14.2	지원대상 아님	4.9
전혀 그렇지 않다	2.4	지원내용 미흡 등	9.5	기타	13.2

*** 자료: 벤처기업 등 840개 대상 면접 및 전화조사 결과 ('14.7월~9월)**

가. 알기 쉬운 조세감면 규정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규정에 용이하게 접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규정을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연구(201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감면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많은 조세담당 부서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기업이나 대기업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하는 자원과 시간에 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 신생기업은 납세협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지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감면 규정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규정을 통해 납세자의 적은 협력비용으로도 조세감면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단계에서부터 쉬운 용어를 활용하고 이해하기 용이한 입법구조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 감면절차 간소화

조세감면 절차의 간소화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절차의 간소화는 중소기업의 조세준수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과 준법비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세금과 관련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 그리고 전문성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세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면 중소기업의 납세협력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고 비즈니스 성장 및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통상 중소기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복잡한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면 세금 관리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세금납부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자원을 줄임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많은 조세 인센티브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복잡한 규칙과 규정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세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면 중소기업이 세금 인센티브에 더 쉽게 접근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세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과 규정 준수 비용을 줄여줄 수 있으며 이 절약된 비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에 재투자도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세금납부보다 핵심 사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규정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해 중소기업이 번창하고 경제 성장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사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감면 악용 및 남용 가능성 차단

세금 감면 규정의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하는 것은 조세행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 성장을 장려하고 연구 개발, 일자리 창출 및 투자와 같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감면 규정들이 개인과 기업의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오·남용되는 것은 조세시스템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자금 조달 능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조세감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들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성실 납세 중소기업의 사업의지를 퇴색시키고 사업을 포기하게까지 만드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

세금 감면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당국은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납부액, 조세 피난처 사용 및 세금 계획 전략과 같은 조세 관행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과세당국이 세금 감면 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식별하고 적절한 과세 조치를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탈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히 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를 적발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기술력 및 전문 지식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세금 감면 규제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 강력한 법집행은 기업과 개인이 세금 감면 규정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세금 시스템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세감세 규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설계되어야 한다. 너무 광범위하거나 관대한 감면규정은 기업과 개인이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고 감면혜택을 남용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는 세금 감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 납부의 중요성과 탈세 및 조세회피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세금 감면 규정의 남용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공공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및 기타 홍보 활동을 통해 세법, 규정 준수의 필요성 및 위반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면규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납세자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감세 규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는 세금 감면 규정이 경제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조세 시스템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사업의지를 꺾는 부정적 행위로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 및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4. 철저한 조세감면 사후관리

조세정책의 의도된 목적이 실현되고 조세감면으로 사용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조세감면 또는 면제 정책은 특정 행동이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과세관청의 사후 관리 노력을 통해 납세자가 감면 대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세감면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납세자만이 조세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세정책 입안자들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조세감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정책의 영향을 추적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정책이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정책은 정부의 세수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통해 적격 납세자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이 적격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면부터 지속적인 과세당국의 사후관리가 필

요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위한 자격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내용 확인을 수행한다. 또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올바르게 계산되고 청구되었는지 확인한다. 한편, 법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납세자가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자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감면 혜택만 취하려는 악의적인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가려낼 수 있다. 그리고 당초 혜택제공이 불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추징을 통해 세수일실을 방지해야 한다.

5.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의 항구화

조세지원제도의 수시 변경과 세법의 잦은 개정은 기업들의 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제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예측가능성도 떨어지므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반적인 조세지원에 대한 재설계를 통한 지원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제지원 제도의 특징에서 살펴보면 미국은 경제회복세금법(Economy Recovery Tax Act)에 근거하여 1981년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을 도입할 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만 혜택을 부여하는 일몰제로 시행하였다가 2015년에 항구화시킨 바 있다. 이러한 항구화 조치는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효과를 항구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세제개편을 통해 2013년에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액 감면을 영구화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산업경쟁 상황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고비용과 고위험에 노출

되는 위험을 비용을 낮추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몰제로 운영되는 세제제원은 일몰 시점의 경제 상황이나 국회의 상황에 따라 일몰이 종료되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는 일몰제로 운영하여 한시적인 지원을 반복적으로 연장하기 보다는 영구화하여 조세지원에 대한 안정적 기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지원은 통상 세수상황과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하여 2년이나 3년의 지원기간을 두고 일몰종료기간에 다시 한 번 그 효과 등을 검토하여 일몰 종료나 일몰 연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몰제도의 장점도 존재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및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통상 일몰제로 운영되다가 항구화되는 지원제도도 존재한다.

[표 15] 조세지원 영구화 사례

연도	내용 (일몰제 → 항구화)	법조문
2013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31조
201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과세특례 적용기한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한 적용기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의2조
2015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적용기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2019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2,400만원 항구 적용	법인세법 제25조
2020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영구 삭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등 역량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일몰제로 운영하기 보다는 법상 조세지원을 항구화하는 경우 기업들의 중장기적 투자 및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6. 연구개발 조세지원 공제율 확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정 추이를 살펴보면,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율 등을 개정해 왔고 그 방향도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체 조세지출에서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이 되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므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공제율은 확대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표 1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정 추이

적용시점	제도 개정 내용
2001	대기업 당기분 방식 폐지
2003	대기업 세액감면율 축소: (증가분) 50%→40%
2008	대기업 세액감면 방식 추가: (당기분) 3~6% 중소기업 공제율 확대: (당기분) 10%→25%
2010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세액공제 도입: (중소)30%, (대·중견) 20%
2013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당기분) 8%
2014	대기업 공제율 축소: (당기분) 3%~6%→3~4%
2015	대기업 공제율 축소: (당기분) 3%~4%→2~3%
2016	공제범위 축소: 관리직원 인건비 제외

2017	대기업 공제율 축소: (당기분) 2%~3%→1~3%, (증가분) 40%→30%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 (대·중견) 20%→ 최대 30%
2018	대기업 공제율 축소: (당기분) 1~3%→0~2% 대기업의 증가분방식 공제율 축소: 30% → 25%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017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다행히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전년대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기업은 감소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대기업 등의 세액공제율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7] 최근 5개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현황

기업구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중소기업	신고 법인수(개)	18,251	20,696	23,830	26,607	28,834
	신고 금액(억원)	9,433	9,865	10,839	12,137	12,185
	전년대비 증감율(%)	2.86	4.58	9.87	11.98	0.40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개)	1,376	1,399	1,384	1,535	1,519
	신고 금액(억원)	18,003	17,763	9,476	10,139	10,813
	전년대비 증감율(%)	-6.83	-1.33	-46.65	6.99	6.65

* 자료: 2019 국세청 국세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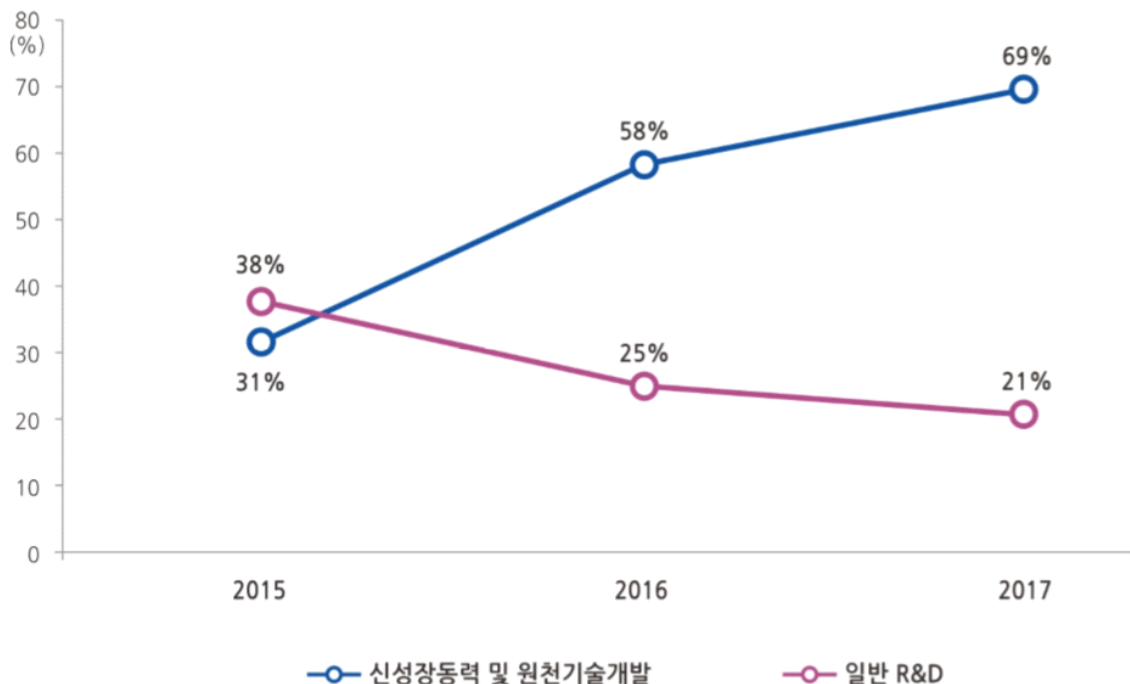
7. 신성장동력 분야 확대

현재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 분야와 일반 산업으로 구분하여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최고 30%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일반 산업은

대기업의 경우 최고 2%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성장동력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세액공제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용 비중은 감소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용 비중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5> 일반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용비중 추이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9

앞으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더욱 넓히고 높은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꾸준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은 여러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면서 그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

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중요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를 통해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세법개정을 통해 주요 분야와 기술들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13개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로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항공엔진, 신에너지자동차, 핵관련 기술, 탄소배출관련 기술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 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 열거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상 분야와 기술을 추가로 지정하고 범위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분류되어 있는 13개 분야는 사회의 변화 및 기술 발전 추이 및 산업구조 재편에 맞추어 탄력성 있게 개정되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8. 창업단계 지원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여 경제와 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넷과 디지털의 혁신은 물리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역량 있는 기업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과 벤처와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이러한 무한 혁신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ICT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같은 외부 혁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MS, 애플, Google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ICT 기업들도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인수와 합병 등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건강한 비즈니스 환경 및 생태계를 위해 조세인센티브를 활용한 스

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참신하고 새로운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이 사업을 개시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초기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통상 스타트업체들이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 문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직원의 월급,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다면 그러한 혁신형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는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은 그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자금이 유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트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자금을 투자하려는 주체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의 특성상 투자자는 본질적으로 고수익을 위해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을 꺼려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특성상 거래관계가 없는 투자자에게 사업을 처음부터 설명하여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검토 후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한 신생 벤처기업이 투자하는 시장의 크기 및 경쟁상황,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 투자자의 성격, 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게 된다.

스타트업의 시간과 수익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발생한 시점부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까지는 (-)의 수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아이디어 개발자가 초기 창업 전까지 자신의 자금으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엔젤 투자자 또는 마이크로 벤처캐피탈의 시드머니 투자이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게 되면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 스타트업 창업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창업 후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통해 정식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기업공개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 투자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엔젤투자

통상 엔젤 투자자는 개인이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스타트업에 투자하게 된다.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보통 투자가 이루어진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수익 목적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스타트업의 참신한 제품 출시 및 새로운 개발투자에 투자 의의를 두거나, 혹은 고위험에 투자하여 다른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노리는 투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통상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는 엔젤투자가 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 엔젤투자의 유래를 살펴보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제작비가 부족해 연극을 중단해야 하는 자금난 상황에서 부유한 개인이 자신의 자금을 제공해 천사(angel)로 불리게 된 사건을 계기로, 스타트업의 초기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천사처럼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 벤처캐피탈

위험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두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이를 위해서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상기업을 철저하게 분석, 조사하게 된다.

㉢ 크라우드 펀딩

군중과 투자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많은 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이

러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투자의 목적과 방식 등에 따라 대출, 후원, 보상, 지분 투자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㉔ 엑셀러레이터

이것은 투자보다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주로 10% 내외의 지분을 투자하여 창업 초기 자본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2016년 기준 미국의 스타트업 관련 투자의 계약과 거래액은 4,500여 건, 5,800억 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신과 모바일, 건강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벤처기업 투자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MS, 아마존 등 종전의 IT 선도 기업들이 자국 내에 산업관련 스타트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이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총 투자금액과 거래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프랑스가 스타트업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가장 많은 거래와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런던에 ‘테크시티’를 조성하고 여러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핀테크,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음악, 패션, 여행 등 문화와 관련된 스타트업의 투자도 높은 편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e-commerce 서비스 기업 및 공유 플랫폼 등에 높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 인센티브는 신생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조세 감면의

대부분의 유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생 기업은 R&D 세액공제를 통해 제품 개발, 프로토타이핑 및 테스트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R&D 활동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은 종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값비싼 장비나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속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기존 감가상각 방법보다 더 빨리 이러한 자산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현금 흐름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 영위 첫 해에 창업비용으로 최대 \$5,00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법률 비용, 회계 비용 및 마케팅 비용과 같은 비용이 포함되어 초기 스타트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9. 민간 및 학계와의 연계 강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산업과 학계 이 두 기관 간의 협력이 혁신, 경쟁력 제고 및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산학 연계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대학과 함께 활발한 연구 및 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인센티브는 대학과 공동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경우 기업들은 연구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은 단기간에 투자의 더 많은 부분을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과의 장기적인 협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미국은 적극적인 연구 지출에 대해 20%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연구 및 실험 세금 공제(R&D 세금 공제)와 같은 산학 연계에 대한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R&D 세액공제는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신기술 및 제품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SR&ED)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대학과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 및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SR&ED)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도는 모든 규모와 모든 부문의 기업이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로 이어지는 연구 개발(R&D)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캐나다 연방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적격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또는 세액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은 학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일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SR&ED 작업에 관련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SR&ED 작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대학 및 연구 기관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SR&ED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 자격을 갖추려면 사업체가 캐나다 소득세가 적용되는 캐나다 통제 민간 기업(CCPC), 단독 소유주, 파트너십 또는 신탁이어야 하며, R&D 활동은 캐나다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SR&ED 프로그램은 급여, 임금, 자재 및 간접비와 같은 적격기업의 SR&ED 지출에 대해 최대 35%의 세금을 공제하고, 연간 최대 300만 달러까지 환급도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SR&ED 세금 공제는 최대 20년까지 이월된다. 이러한 조세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은 학술 파트너와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 전문 지식 및 연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학술 기관은 업계 파트너가 제공하는 자금 및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SR&ED 프로그램은 산학 협력의 이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학계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연구 개발에 참여할 재정적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촉진했으며 생명 공학 및 나노 기술과 같은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학 연구협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2020년 민간기업의 총 연구개발비

73조 원 중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는 1조 1000억 원으로 1.5%에 불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연구에 대한 실태조사⁸⁾에 따르면, 산학연 협력연구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7%에 불과하여 중소기업들이 협력연구 활동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중소기업 스스로 협력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협력연구 과정에서 자체적인 내부 연구개발 자금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를 지원할 여력이 없어 산학연 협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6> 산학연 협력연구 수행 중 애로수준 정도



따라서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연구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학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후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의 협력을 유도하는 단계별 연계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산학 협력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낮추어 중소기업이 쉽게 산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8) 2018년 기준 총 3,141개의 중소기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19.7.29.~9.13.)하여 설문응답한 400개 기업 및 10개 중소기업 대표자 및 경영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함

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산학연 협력 활동으로 연구·인력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에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산학 연구 협력은 학술 연구와 산업 응용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실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과 Google은 1995년에 시작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Google 검색 엔진과 Google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몇 가지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될 수 있었다.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는 미국 정부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 센터인 Lincoln 연구소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레이더 시스템과 위성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Berkeley 대학은 컴퓨터 칩 제조업체인 Intel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상변화 메모리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 메모리를 비롯한 몇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와 삼성전자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한 여러 기술이 개발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현대자동차는 첨단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과 연료전지 기술을 비롯한 여러 기술을 개발하였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POSCO도 신소재 및 제조 공정 개발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고장력강과 새로운 합금을 비롯한 몇 가지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다.

앞서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산학연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모두 대기업과 대학교의 연구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가진 연구소 및 대학교가 중소기업과도 연구·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VI.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23년 2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술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혁신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축하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테슬라(Tesla)는 CEO 일론 머스크의 반복되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구설수에 휘말리는 일도 많지만 현재 시점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기술 분야에 있어 명실상부한 리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테슬라도 초창기에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 이후 여러 단계의 기술개발 및 성장을 통해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발돋움 했다. 최초 Tesla에 대한 아이디어는 2003년 Martin Eberhard와 Marc Tarpenning이 효율적이고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실리콘 벨리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회사의 초기 목표는 휘발유 차량과 경쟁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스포츠카인 Tesla Roadster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 Tesla는 나중에 회사 성장의 핵심 인물이 되는 Elon Musk를 포함하여 개인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양의 자본을 모을 수 있었다.

2008년 최초의 전기 스포츠카인 Roadster를 출시한 테슬라는 이때부터 전기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10년 Tesla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2억 2,6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때부터 충분한 연구개발 자금을 토대로 Tesla는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라인을 확장하여 2012년에 Model S 세단을 출시했다. 2013년 Tesla는 운영을 확장하고 새로운 제조 시설을 개설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Tesla는 소유자가 빠르고 쉽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Supercharger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혁신을 계속했다. 이후 Tesla는 Model X SUV도 소개하고 더 넓은 시장을 겨냥한 보다 저렴한 전기 자동차인 Model 3 작업을 시작했다.

다. 2016년 Tesla의 Model 3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자동차 판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전기자동차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Tesla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여 미국과 중국에 새로운 제조 시설을 만들고 있으며 Tesla Semi 트럭 및 Cybertruck과 같은 신제품도 출시하고 있다. 회사는 또한 Tesla 차량이 특정한 조건에서 자기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Autopilot 시스템과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혁신을 계속해 왔다. 현재 이 회사는 전기 자동차 산업의 리더가 되었으며 사업영역을 에너지 저장 및 기술과 같은 다른 영역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Tesla는 최초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이후 혁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테슬라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발전한 여러 기업들이 있다. Alibaba같은 경우에는 전자 상거래, 소매 및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의 다국적 기업이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현재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강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libaba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개발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또한, Slack은 팀 협업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미국 기반 기술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과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의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키면서 가상 협업 도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Grab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동남아시아에서 운영되는 차량 호출 및 배달 서비스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여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서비스 개발에 혁신을 가져다주었다. Rulai의 경우 AI 챗봇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는 미국 기반의 기술 회사이다.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챗봇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여 성공적인 혁신을 이끈 중소기업은 수없이 많다. 이들 기업의 주요 특징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을 수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창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혁신기업들도 초기에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발전 과정에서 여러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혁신과 개발에 전념함으로써 실패 가능한 스타트업에서 명실상부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앞서 살펴본 조세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이나 신생 스타트업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가고 혁신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혁신의 대명사가 되는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등장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에 대한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성장과 국가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차원의 연구 개발(R&D) 활동 및 기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세금 지원 계획과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지원 방안에는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공제, 혁신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창업 및 기타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정 세금 또는 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면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러한 세제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 혁신 촉진 정책의 효율성, 자금 및 기타 자원의 가용성, 전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정치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 지원 계획만으로는 4차 산업 혁명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규제 개혁,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 개선, 기술 훈련 및 교육 강화와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항상 자금 조달은 중소기업의 주요 과제이다. 정부는 여러 정책들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정신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대출 등도 포함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그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면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전략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강점과 과제를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과 분야를 식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고 일자리 대체 및 불평등과 같은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연구 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종전 기술을 더 나은 기술로 개선하기 위해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조세 인센티브의 효과적인 설계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자금 지원 등의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스스로 적극적 관심 및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추가로 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투자하여 구축하기 어려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산업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광대역 네트워크, 데이터 센

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고 디지털 연결에 대한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많은 국가에서 경제의 근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자금과 자원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또한 자금과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 자본가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혁신과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기업가 정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국가가 4차 산업 혁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간단하게는 신생 기업에 자금과 자원을 제공하고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가 정신을 촉진할 수 있다. 유리한 규제 환경은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소기업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R&D 활동을 위한 자금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 기업가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위험 감수와 혁신을 중시하는 기업가적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장려할 수 있다. 성공적인 기업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자금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위해서 산학 협력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여러 국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자금을 제

공하고, 지식과 자원의 공유를 장려함으로써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산학 협력에 앞서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는 코딩, 데이터 분석 및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이 포함된다. 회사는 또한 소속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은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 프로그램에 자금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현장의 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 전문 지식을 얻으려면 네트워킹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잠재적인 파트너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네트워킹과 협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서로 협업하고 가용자원에 큰 비용의 지불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의 생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혁신 클러스터의 도입 및 내실화를 통해서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 클러스터는 상호 연결된 회사, 전문 공급업체 및 혁신에 참여하는 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과 자원을 제공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중소기업과 기타 조직을 연결하는 가상 혁신 클러스터의 생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기타 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제 협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국제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적 노력을 통해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 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무역 협정을 촉진하고,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국

가 정책적으로 국제 파트너십과 합작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혁신 중소기업 간의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국제 박람회 및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금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특징인 인공지능은 해결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과제도 제시한다. 무한경쟁시대 승자독식의 기업문화는 사회에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신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일자리 대체 및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개발 정책이 포함된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업이 정신과 혁신에 여성, 소수자 및 기타 소수 집단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어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다. 국가는 중소기업 육성 뿐 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90,000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여 미국 국세청(IRS)의 인력규모를 두 배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2019년에 징수되지 못한 세금이 약 5,540억 달러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그 수치가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으로 인해 기업의 복잡한 국제 거래가 활발해져 필연적으로 탈세 문제가 수시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이고 은밀한 탈세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게 세금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도 과세관청의 인력확충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유사한 이유로 미국도 2022년 10월 27일 2023년 세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화 응답을 돕고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IRS 대리인을 4,000명 추가로 고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세무공무원을 추가 증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금 징수와 관련된 업무도 증가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확대해야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세무인력의 확충은 복잡한 공제감면 제도로 인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일 것이다.

< 참 고 자 료 >

[국내·외 문헌]

- 김영배(2005), 혁신형 중소기업: 기업특성, 기술학습과 경영성과, 과학기술 정책연구원(STEPI)
- 김재진(2014),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 안승구(2020),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손원익(2002),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한국 조세연구원
- 손원익·김상헌·김형준(2006),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타당성 연구, 과학기술부
- 송종국(2007), R&D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종학·김진수(2006),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기업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 산업경제연구 19(4), 한국산업경제학회, pp.1653-1679
- 임성중(2020),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아태비즈니스연구
- 이병헌(2007),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혁신역량의 차이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 정민우(2019), 2018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정규언·박재환·오광욱(2012), 연구개발 관련 조세제도 개선 연구,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국세청(2018),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 국세청(2018), 혁신성장 관련 세정지원 매뉴얼
- 벤처기업협회(202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중소기업중앙회(2022), 2022년 중소기업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
- Brown, K.(1984), The R&D tax credit: issues in tax policy and industrial innovat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Washington, D.C.

Berger, P. G.(1993), “Explicit and implicit tax effects of the R&D tax credi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2), pp. 131-171.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12), The Corporate R&D Tax Credit and U.S.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2012.

Dominique, G. and Bruno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1997), “Does Government Support Stimulate Private R&D?,” OECD Economic Studies, No. 29.

Hicks, D. and Hegde, D.(2005) “Highly innovative small firms in the markets for technology” , Research Policy, Vol. 34, No. 5, pp. 703-716.

Kim, Y. and Song, K. and Lee, J.(1933),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small firms of Korea” , R&D Management, Vol. 23, pp. 215-226.

[홈페이지]

국세청, www.nts.go.kr

벤처기업협회, www.venture.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www.innobiz.or.kr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www.mainbiz.co.kr